

# “기초의원 잇단 비위…징계안 강화하라”

광주 시민단체들 내일 기자회견

윤리·행동강령 혁신 촉구

윤리위원회 시민 참여 등 필요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나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방의회의 윤리·행동강령을 강화하는 한편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도를 넘은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기초의원들이 주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역할을 망각한 채 직위를 이용해 이권을 쥌려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지방의회 차원의 별다른 제재가 없으면서 지역 공무원과 지역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 특히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부당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적절치 못한 예산을 끼워 넣으라고 강요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피해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 21과 진보연대,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앞에서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의 윤리·행동강령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단체들은 “지방의회는 시민, 구민들의 위임된 권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는 비위를 저지른 기초의원을 감싸기 바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없는 모습을 보

여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 7월 배우자 명의 업체에 67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이 윤리위원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으면서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비위 의원인 선승연·이현수·전미용 등 3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사과’하는 것에 그치기도 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비위, 비윤리적 행동과 자정의 노력을 상실한 행태는 비단 북구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북구의회를 통해 공론화되면서 제명조치를 포함한 강화된 징계안이 마련됐다”며 “북구의회 징계안도 개선돼야 하지만 징계안 속에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의원을 제명하는 내용이 없는 기초의회도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정을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에는 시민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뒤 시·구·군의회의 비위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이에 따라 15일 북구의회 비위 의원을 고발조치하고, 시·구·군의회에 윤리·행동강령 혁신안을 제작해 발송한 뒤 민주당에도 시·구·군의회의 관련 혁신안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기우식 참여자치 21 사무차장은 “오는 16일 열리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주정신에 부합하는 지역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연대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내일 9월 모의평가 응시자

지난해보다 6만여명 줄어

‘모의 수능’으로 불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16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평가에 응시한 졸업생은 지난해 보다 1만여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만 7347명으로 재학생 40만 9287명, 졸업생 등 수험생(재수생)은 7만 806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9월 모의고사 응시인원 54만 9224명(재학생 45만 9217명·졸업생 등 9만 7명)에 비해 6만 1877명 감소한 수치다. 재학생은 4만 9930명, 졸업생 등 수험생은 1만 1947명이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올해 대학입시에 재수생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은 우세했지만 반대의 결과다. 이 같은 결과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입시업계 분석이다.

실제로 입시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수생이 급증할 것이란 일반의 예상과 달리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수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교육당국이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 문을 닫는 상황이지만 모의평가 당일엔 문을 열어 재수생이나 ‘n수생’들도 학원에서 방역수칙을 따르며 대부분 시험을 치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이번 모의평가에는 6월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자가격리, 발열 등으로 시험실 입실이 불가능한 수험생들도 온라인 시험을 볼 수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코로나19와 추석 연휴 특별 배송으로 택배 대란이 예상되면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14일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대책 마련과 추석 연휴 전 추가 인력 확보 등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 택배노동자들 추석연휴 물량 폭증·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정부 권고안 즉각 이행” 요구

광주지역 택배·물류운송 배달 노동자들이 추석연휴 물량 폭증으로 인한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1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갖고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의 2차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확인된 것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숨졌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과 추석에 겹쳐 50%이상의 물량증가를 앞두고 노동자들은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조치인 정부 권고안에는 ▲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증원 ▲휴게시설 확충 ▲지연배송 사유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 금지 ▲권고안에 대한 이행 점검과 택배 사 서비스 평가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지만 추석 물량 특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늘까지도 정부 권고안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택배업체와 우정사업본부에 별도의 추가 인력을 즉각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노동부·국토부는 택배, 집배, 화물운송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을 비롯해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산업안전 감독, 산재보상 등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전남교육청 전교조 교사 4명 복직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복직 발령을 했거나 복직을 추진한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지난 2016년 2월 직권 면직된 정성홍 교사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취소와 함께 면직 당시의 학교인 신용중학교로 복직 발령했다. 시 교육청은 행정적·재정적 피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거쳐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도 3명의 교사에 대해 복직을

위한 제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도 교육청에서는 2016년 당시 전교조 전남지부장 이었던 조창익 교사와 수석부지부장 김현진, 중앙회 조직실장이던 정영미 교사가 면직됐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의 요구에 따라 4년 전 교육청이 세 분의 선생님들을 면직 처분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들의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위한 제반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여대 수시 신입생 전원에 특별 장학금

광주여자대학교가 2021학년도 신입생 전원에게 40만원~60만원의 ‘마음나눔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마음나눔 특별장학금’은 2021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최초 합격자에게는 60만원, 총원 합격자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이 장학금은 일반 장학금들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마음나눔 장학금은 마음챙김을 통한 마음나눔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마음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신입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다.

오재연 입학부처장은 “마음나눔 장학생들이 마음교육을 통해 자기돌봄과 마음나눔을 실천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기여하는 ‘마음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슬로건을 기치로 2015년 마음교육 현장을 선포한 광주여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마음(MUAM)’을 기반으로 한 통합형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데 힘쓰고 있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동구 5년만에 ‘인구 10만 회복’ 눈 앞

계림8구역 2300세대 입주 시작

광주시 동구가 인구 10만명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10만 명 선이 붐비던 이후 5년만이다.

14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계림8구역 그랜드센트럴 2300여 세대 입주로 전입 주민이 급증해 인구 10만명 회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동구의 인구는 4만 9112세대, 9만 9159명으로 집계됐지만, 계림8구역 그랜드센트럴 2336세대가 전

입신고를 마치면 모두 5377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구는 인구 ‘10만 명 회복’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재개발 사업까지 마무리되는 2024년이면 13만 명은 순조롭게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기간 동안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인력 1명을 파견하고, 주 3회(월·수·금)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 현장민원실’을 운영 중이다. 또 전입독려 차원에서 오는 16일 계림8구역 10만 번째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축하 이벤트를 가질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북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31억 확보

광주시 북구가 정부가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됐다.

14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시비 등 총 3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북구는 추가로 구비를 포함해 총 32억 5000만원을 투입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북구는 이번 공모에서 생활기반사업으로 도로 확장·포장 2건, 저수지 보수·보강 1건 환경문화사업으로 누리길 2건 등 총 5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환경문화사업은 ‘제4수원지 주변 누리길 조성사업’과 ‘평촌반디마을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충효동과 인접해있어 무등산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